

# “사모펀드 규제 필요로 입장 선화... 공짜점심은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사-투자자 양측 책임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측면에서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던 소신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부에 있을 당시 기관투자자는 스스로 검토·투자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까지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금융위원장이 되면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청문회 때도 이 같은 생각을 피력했다”며 “그러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등 사모펀드 악재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됐고, 서서히 사모펀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소비자 측면서 제도개선”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아전에 있으면서 평소 사모펀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우리나라가 은행 위주로 금융시장이 성장해 새로운 벤처나 창업아이디어 등을 할 여건이 안 된다. 자본시장으로 돈을 돌려야 벤처 등이 육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가

DLF 손실사태 등 문제 많아 제도 허점 촘촘하게 개선 투자자 ‘자기 책임’ 강조 DLF 지위고하 엄중 조치 라임자산운용 시장불안 대응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었고 저금리시대에 투자자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이자수익을 주는 기회도 제공했지만, 지금은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20년 후에 되돌아봤을 때 최근의 사태가 있어 사모펀드 시장이 발전할 수 있었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LF 투자는 공동 책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금리 연계 DLF의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투자는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은 위원장은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금리 시대에 정기예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으려고 DLF나 리츠 등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투자자에게도 책임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송진영 기자 son@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DLF사태에 대한) 책임은 공동 책임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불안전 판매에서 설명 의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으나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기 여부는 우리가 ‘맞다, 아니다’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이 건 형사처벌이면 검찰과 법원에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불안전판매 여부만 금감원에서 (검사)해온 것이다. 내가 여기서 ‘사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DLF 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 조치”가 판매 창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의 행장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원론적이라고, 당연한 것”이라며 “책임의 범위가 밝혀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설계·운용·판매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조치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또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를 중단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

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며 “시장 불안요인을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이날 은 위원장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꼽았다.

은 위원장은 “오늘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접수가 시작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의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금년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과 금감원 심사결과를 토대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두 곳의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적정성에서, 키움뱅크는 혁신성에서 미흡판정을 받았다.

은 위원장은 또 다시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두 불허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인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국의 노력에도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 금감원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올해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메자닌펀드의 역습... 깜깜이투자 손실 눈덩이 ‘펀드런’

6200억 규모 펀드 환매 중단 환매요청 빚발→유동성 부실 환매시기도 고지 안해 불안↑ 관계자 “사태 확산 가능성도”



을 끝낸 저녁께 관련 사실을 고지하면서 투자자들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이틀 밤을 기다려야 했다.

판매사들도 날벼락을 맞았다.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의 클레임(비난)을 수용하면서 자산운용사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일각에 알려진 것보다는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펀드 물량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순 없지만 현재는 리테일 쪽 잔고가 670억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여기에 기관 물량을 빼면 개인투자자 몫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단위 리스크 될까?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결정으로 펀드에 묶인 돈은 약 6200억원 가량이다. 환매 중단이 선언된 모펀드 ‘플루토 FI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에 연동된 자펀드 중 개방형 4400억원, 폐쇄형 1800억원의 펀드가 환매 중단된 상태.

문제는 현재의 유동성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1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플루토 펀드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노출돼 있고, 플루토 펀드와 연동된 3조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자펀드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메자닌 채권은 통산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만기로 가진다. 해당 기간 이후 전환가격 대비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 전환 후 매도를 통해 투자자는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면 상황이 어렵게 된다. 원금이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인데, 이마저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 피해는 투자자의 몫이 된다.

라임자산운용은 현 시점에서 회수에 돌입하는 것은 펀드 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환매를 일단 중지한 상태다.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원금이라도 받아서 더 큰 손실을 막아야 하는 결정에 놓이게 됐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으로부

터 환매 계획에 관련된 대책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라임 운용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모험자본 육성, 벤처펀드 등 열풍으로 지난해 표면이자율 0% 메자닌이 불티나게 팔렸다”면서 “그 가운데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는 부실한 자산까지 펀드에 담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우려되는 점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라임운용의 운용자산(AUM·설정원본+계약금액)은 4조9319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8189억원)과 비교해 2조1130억원 증가했지만 올 6월 말(5조3934억원)과 비교하면 4615억원 감소했다.

/손연지 기자 sonumji301@

>> 1면 ‘20대 국회 슬픈자화상’서 계속

## “韓 경제 버려진 자식” 재계도 쓴소리 빚발

박용만 회장 “현안 논의 기억도 안나”

경기 악화에도 정치권이 요동치는 민심 잡기에 몰두하면서 여론은 물론 재계에서도 토로가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질타다. 박 회장은 지난달 18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요즘 우리 경제가 버려지고 잊힌 자식 같다”고 정부와 정치권을 질타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민관정(민간·관료·정치)이 총력 대응해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현안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게 박 회장 평가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일일이 만나 “정치가 기업과 국민의 살림살이를 붙들어줘야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는) 경기 침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본격 실시한 지난 7월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내 나라 말을 못 쓰던 시절에도, 심지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기업을 지켜왔다”며 “한국-일본 간 기업이 약속과 거래를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쟁 속에서도 책무와 책임은 다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